



출산 포기는 불안한 미래에서 나온다

2014.01.14 | 이은경_새사연 연구원 | eundust@saesayon.org

새해가 밝았다. 신년을 준비하는 분주함과 함께 민영화와 불통하는 정부에 대한 피로감도 깊어간다. 청말띠의 해는 아이를 적게 낳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왜 우리나라는 운 좋은 아이를 낳고자 노력하는 것일까? 이는 삶의 불안을 운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사주팔자에 맡긴 출산율

2006년 황금돼지해, 2012년 흑룡해는 사주가 좋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으나 팔자가 사납다는 청말띠해는 출산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새해벽두를 장식하고 있다. 또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많은 산모들이 좋은 사주를 위해 날짜뿐 아니라 시간까지 받아온다고 한다. 대체 한국에서 아이낳기 위해서는 근거도 없이 좋다는 해와 날짜를 선택해서 낳아야 하는가? 출산율은 사주팔자에 따라 움직이는가?

우리나라 출산율은 자살율과 더불어 한국 사회 병폐를 바로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세계 최저출산율과 세계 최고 자살률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인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피상적이다.

*“아이를 낳지 않고 노후의 삶이 불안하다고?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만들자.
새마을 운동처럼 출산장려캠페인을 하고 자살예방운동을 펼치자.
보육비용이 문제가 되고 3-40대 부부표가 중요하니 아동보육예산을 늘려야겠군.”*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쳤지만 단선적인 문제 해결방식 뿐이었다. 그 결과 출산율은 2010년 기준 1.2명이며 급격하고도 꾸준한 감소 추세다.



알레시나와 글레이저가 의 「복지국가의 정치학」에 따르면 복지가 잘 된 유럽에서는 개인의 빈곤이나 불행은 ‘운’에 기인한 것이 크다는 응답이 훨씬 높다. 반면 미국은 개인적 노력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유럽은 개인의 성실함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운’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며 가난을 벗어날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70%) 더불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지제도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이런 믿음을 가진 88%가 현 미국의 복지제도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대로 유럽은 소득은 운에 의해 결정되며(54%), 가난한 사람은 빈곤의 탓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많았다.(60%)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을 지닌다.”¹⁾

인구는 그 사회의 불안을 나타내는 척도

인구수와 구성문제는 쉽게 단언할 수 없는 까다로운 영역이다. 지구 생태적 환경까지 고려할 경우 인구가 많다/적다는 문제는 쉽게 결론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노동인구 부족=부양인구 대비 노동인구 부족=아이 낳기 독려”라는 단순한 인구정책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안정적 영양공급과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는 인구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다. 200년 전, 산업사회가 되기 전까지 인구 억제 수단은 높은 사망률이었다. 정상적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7-8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하지만 높은 영아사망률과 조기 사망, 기근이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은 전 세계 인구를 5-10억 수준으로 조절해왔다. 특히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은 노동인구 대비 부양인구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해준 메커니즘이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높은 사망률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즉 높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 특히 낮은 영유아 사망률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 시기가 베이비붐 시대다. 여기에 피임, 출산 조절이 가능해지는 의료 기술이 개발되자 낮은 출산율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현대사회 노동인구 대비 부양인구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폭발했던 인구증가와 바로 뒤이은 저출산이라는 두 조건이 결합되어 생긴 현상이다. 인류역사상 매우 특수한 상황이며 향후 인구가 어느 수준으로 수렴하고 지구 생태가 그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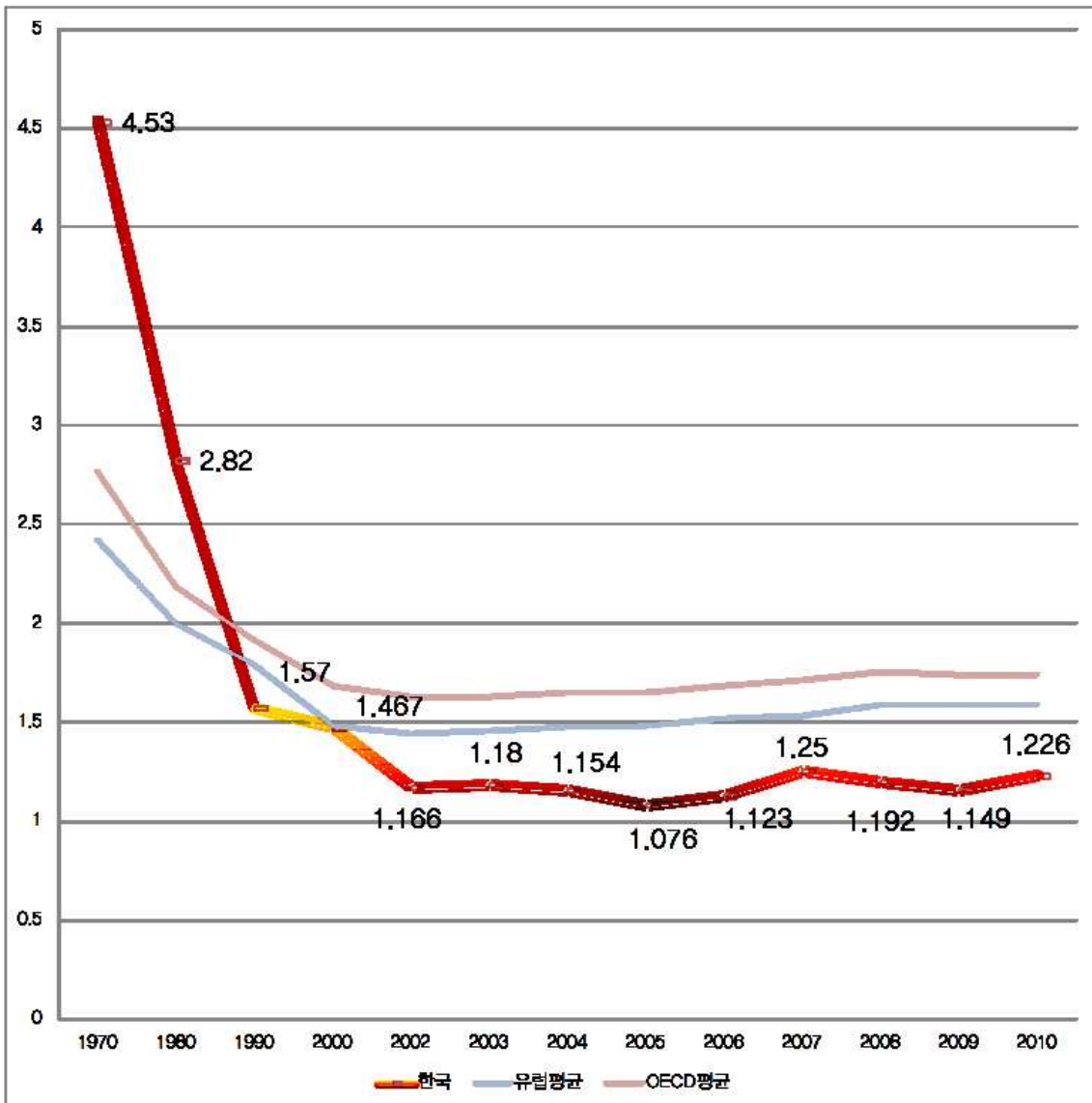
1) 출처 :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 전용범 옮김. 생각의 힘



한국의 경우, 모든 사회현상은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산업화를 겪은 모든 국가에서 “고출산 고사망 → 고출산 저사망 → 저출산 저사망”의 변동이 나타났고 베이비붐과 이후 급격히 다가온 노동인구 비율 감소 문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한국사회 특징은 이 변동이 너무 급격하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률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매우 빠르게 옮겨왔다.

특히 1980년에 이미 2.87로 낮아지던 출산율은 90년대 1.57까지 떨어졌고 이 추세가 지속되자 급히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황금돼지해, 흑룡해 등 운세와 관련된 변수다.

[그림 1] OECD 국가 합계출산율 연도별 추이 (단위:명)



출처 : Factbook 2012 - ISSN - © OECD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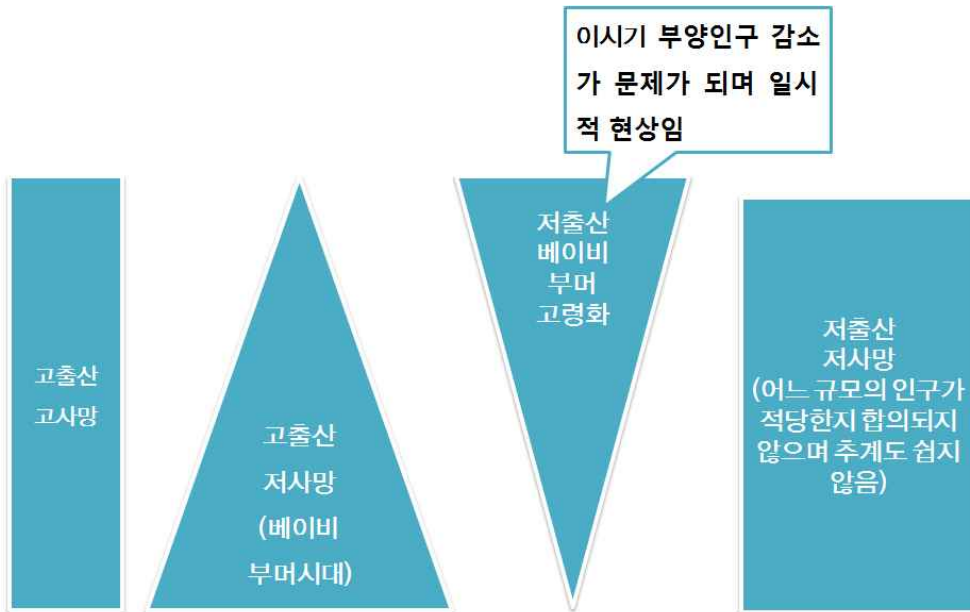


출산율과 노인부양비의 상관관계

저출산 문제는 손쉽게 출산장려운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다루어지지만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양비용 문제는 저출산과 큰 연관이 없다. 현재의 출산율을 높여 노동인구를 늘리는 효과는 30년 후에 나타나며 지금의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출산을 사회문화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문제이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시각은 70년대 새마을 운동식 출산률 저하 운동이나 2000년대 출산장려 운동 모두 동일하다. 아이 출산, 양육 문제를 사회에 기여하는 애국주의적 시각으로 강제하는 매우 폭력적 접근이다.

[그림 2] 인구구조의 변화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 규모를 계속 확장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생태적 물음도 존재한다. 인구 구조가 “고출산 고사망 → 고출산 저사망 → 저출산 저사망”으로 변천해오면서 아래 그림처럼 젊은 층과 노인(부양층)의 비율이 역전되는 시기가 문제이지,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가 계속 증가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그림 2] 어느 규모의 인구수를 지구환경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도 현재 수준에서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들로 손쉬운 출산장려운동으로 인구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사회 저출산 문제의 본질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은 왜 문제가 되는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출산을 포기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가임연령대 남녀를 조사해보면 평균 2-3명정도의 아이를 원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현실은 연애·결혼·출산 등 인간적 삶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3포세대의 등장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지출이 가장 하위권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비용을 그나마 제일 많이 지출하고 있다. 본격적인 보육비 지출은 2004년부터 시작되지만 출산율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양육비용을 책임질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단순히 탁아시설에 보내거나 양육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4년 예산에서도 보육분야 예산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그것도 실제 통과 과정에서 증액된 내역이 많다. 하지만 [표 1]과 [그림 3]을 보면 출산율과 보육분야 예산 증가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쌍춘년, 황금돼지해, 흑룡해와 같이 운이 좋다는 해에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2014년 보육분야 예산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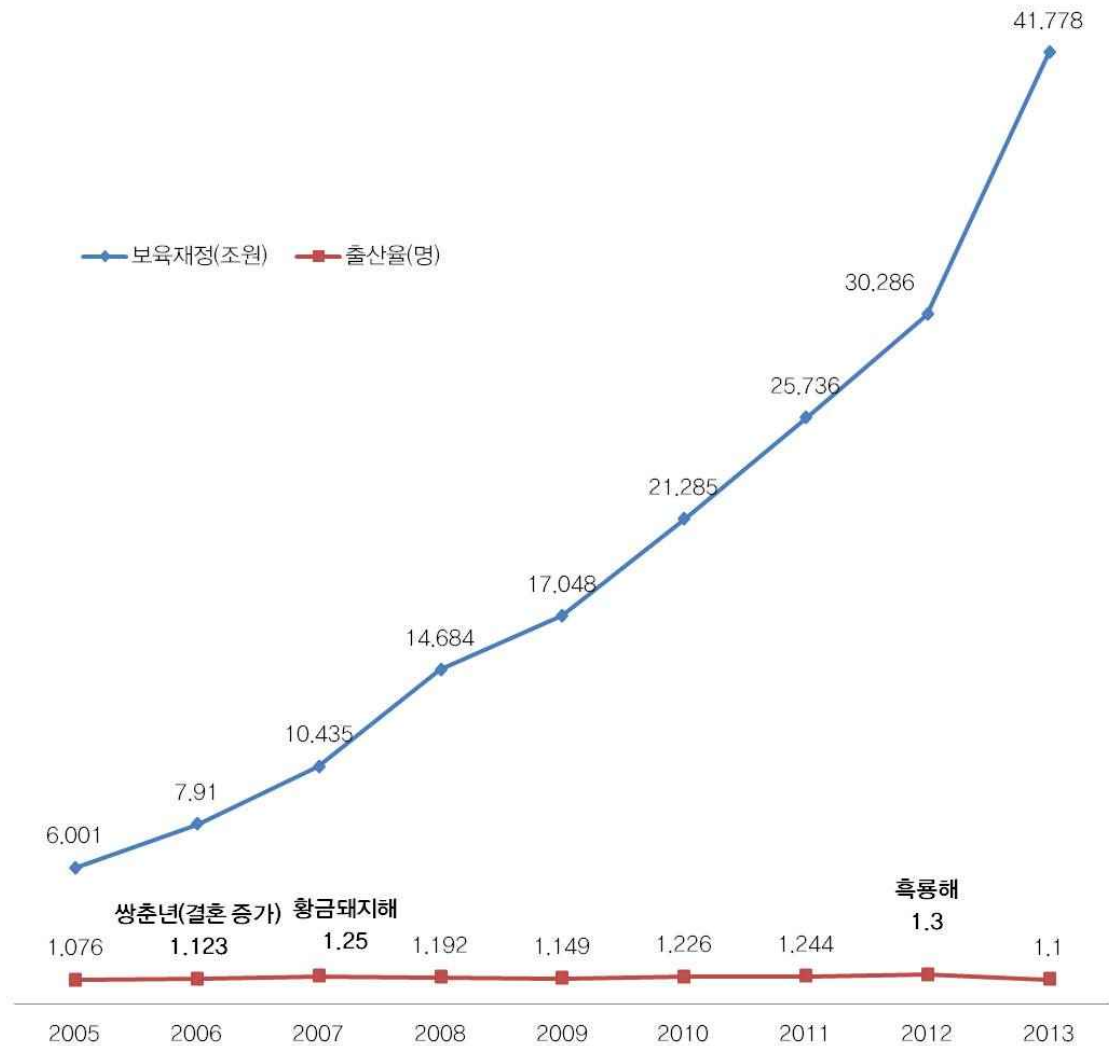
구 분	'12년	'13예산(A)	'14예산(B)	증 감(B-A)	증가율(%)
총 계	2,652,780	4,131,345	5,268,093	1136748	
어린이집운영지원	422,653	444,463	467,111	△22,648	5.1
영유아보육료지원	2,021,514	2,598,219	3,329,228	△731,009	
어린이집기능보강	11,867	23,610	42,432	△18,822	
보육인프라 구축	15,377	26,990	16,242	△22,248	△57.8
어린이집평가인증	6,026	6,668	8,600	1,932	29.0
어린이집지원	72,697	150,445	189,16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2,646	880,950	1,215,319		

자료 : 국회. 2014. 정부 예산안_보건복지부_0102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Budget.jsp?bill_id=PRC_N1L30110V0Y201B1Y0V3S0F6N0Y3U1



[그림 3] 보육재정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보육/탁아에 편중된 정부정책

합계출산율 1.3명 이하를 초저출산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육지원재정이 급증한 이후 출산율은 큰 변동없이 초저출산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0.1-2명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변수로 치면 황금돼지해와 흑룡해 등 운수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기왕에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한 부모가 해를 선택한 것을 뿐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평균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체출산율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으로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 즉 부모 2명이 2명 정도의 아이를 낳을 경우 인구 구조가 큰 변동없이 유지된다고 본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보육예산 확대가 의미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아니다. 보육재정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은 2005년부터이며 그 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해왔다. 출산율 증가의 목표도 있으나 3-40대 부모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측면도 존재한다. 문제는 보육지원사업의 목표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부모, 특히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정책과제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아동/가족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여타의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보육(탁아)지원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더라도 항목자체가 아동복지, 보육지원예산으로 나뉘져 있고 아동복지예산은 2천134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저소득층 아동 지원예산 등에서 대폭 삭감되어 아동복지 예산은 작년 대비 256억이 줄었다.

흔히 가족정책은 ▲여성이 일과 가정(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아동이 문제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임신 출산 양육으로 가정 경제가 위태로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정책 등으로 구분된다.

일/가정 양립 역시 여성만이 아닌 부모로 확대되었으며 단순 보육/탁아정책이 아닌 부모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장에서 부모의 노동조건과 보육지원의 결합,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보육지원, 엄밀하게 말하면 보육기관 이용에 대한 지원정책만 존재한다. 반면 보육지원정책은 실제 여성 고용을 제고나 출산율 증가와 같은 효과보다는 유아사교육 시장만을 확대시킨 결과를 낳고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낳아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관련된 요인은 ①경제적 ②심리적 ③생물학적 ④가족문화적 요인이 결합된다. 가족, 일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요인의 작용이 크다. 노동환경의 질적 저하로 고령 결혼이 늘어나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며 가부장적 가족 문화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불안한 미래, 자발적 출산포기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낳고 키우는 아이와 그 가족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데 있다. 최고로 키워서 20%, 아니 1%에 들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 담보되지 않는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30년이 넘는 부모의 엄청난 재정적, 시간적, 인지행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투자하려면 부모의 삶은 포기해야 한다. 가능하면 한명만 낳아 투자를 집중하거나 아예 낳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보육을 넘어 양육/교육기간 내내 심각한 경쟁에 시달려야 한다. 부모 중 한명은 아예 전담해서 아이교육을 담당해야 하고 아이들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학업양이 시달려야 한다. 그렇게 해도 수도권 대학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여기에 서울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취직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 학력과 상관없이 엄청난 고시, 공무원,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열풍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20%안에 들지 못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낮은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질병, 실직 등 위기상황에 매우 취약하다. 연애, 결혼해서 아이 낳기가 쉽지 않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결혼비용과 주거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런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부 보육비용지원과 D라인이 아름다운출산캠페인으로 출산율은 움직이지 않는다. 서구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양육문제에 집중하는 유형과 일/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집중하는 유형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육과 부모의 경제활동을 조화시키면 출산/양육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

한국 사회 저출산은 보육과 부모의 역할분담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복지예산 중 그나마 양육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꿈쩍도 하지 않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미래의 삶이 소수가 아닌 대다수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희생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열심히 살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 너무 경쟁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지 않는 이상 출산과 양육, 미래준비에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